

안철수 “중도통합으로 주도권 잡겠다”

선거연대는 일단 유보 지지를 회복 최우선 과제 사안별 정책공조 전망 당내 ‘탈 호남’ 우려도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주창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중도통합’이라는 새 메시지를 꺼내들고 외연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으로부터 통합 내지 연대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외연 확대를 통해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소야대, 여야 4당 교섭단체 체제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 국민의당이 강한 야당으로서 중도통합의 길을 걸으면서 좌우를 수렴해 중심으로 서겠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원탁회의 행사에서 “국민의당은 중도통합의 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중심 정당으로서,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강한 야당의 길을 간다면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대표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야권연대나 정계개편 국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지도가 50%를 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권 통합 또는 야권 선거연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확장 구상을 밝힘에 따라 야권 통합론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안 대표는 구체적인 ‘선거연대’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앞줄 가운데) 3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원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밝히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안 대표는 지난 8월 16일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바른정당과 연대 및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 전에 정계개편은 없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사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지강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 등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에서 정당득표율 26.74%를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5·9 대선과 재보궐 파문을 거치면서 지금은 지지도가 한자릿수대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정국 주도권은 물론 야권의 주도권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만 향후 정국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야권연대 내지 정계개편 국면이 찾아올 경우에도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안 대표의 판단으로 보인다.

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안 대표의 중도 성향, 그리고 보수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안 대표로서는 선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안 대표가 ‘탈호남’에 대한 당내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호남계 인사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보수야당과의 접촉면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화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사안별로 자연스럽게 정책연대의 틀을 가동하며 야권공조의 가능성을 엿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

여야, 北 미사일 혼선 질타

국방위 전체회의... “靑과 엇박자, 국방부 패싱 인가”

여야는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의 초기 혼선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일본·러시아는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이를 뒤인 28일에는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독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표라고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제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

럼 보았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초반에는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킵드 미사일과 달리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답했다.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초기 국방부가 방사포보다는 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방사포’라고 발표했다고 ‘국방부 패싱’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정보 협의와 처리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국방부가 패싱된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가도 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종말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재입 여부를 분석한다고 했지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농해수위·윤리특위 위원장 고심

운영위·정보위 위원장 조정 놓고 野와 줄다리기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자리는 민주당 몫이었으나 장관 차출로 공석이 되자 야당과의 상임위원장 변경 협상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이계호 의원과 전체회의 의원들 각각 직무대리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통상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국회 관례지만, 조기 대선 전 여당으로서 위원장을 차지한 한국당은 정권 교체 후에 이를 내놓지 않을 뿐 아니라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 정기국회 개회 전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조정을 마쳐달라고 각 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께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서 늦어도 9월1일까지는 체제를 정비하자고 말씀하셨다”며 “다만, 의장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추천할지,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 확보를 더 추진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과 직무대리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대표단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당이 제1당인데도 한국당이 여당이라고 운영위를 가져갔다”면서 “지금 이러한 것은 신의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자리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는 9월 중순 정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운 걸고 농어업 예산 증액 투쟁”

국민의당 호남의원 기자회견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31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놓아 어이가 없고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견문에는 전남·전북을 지역구로 둔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준영·박지원·손금주·유성열·윤영일·이용주·이용호·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들은 회견문에서 “내년 정부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연 역대 최대 규모”라며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178분의 1에 불과한 0.04%(53억원) 증가에 그쳤다. 더군다나, 해양수산부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0.6%(300억원)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가 예산폭탄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농수산업과 농어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농어민을 배반하고 포기하는 태도를 통렬히 질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한국당 푸대접 이해 안 가”

“5·18 주범 우리가 처단” 적반하장 주장 논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왜 호남이 자유한국당을 ‘출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적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대표는 31일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주범인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를 우리가 다 처단했다”며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 출대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일 민주화 운동이라 규정할 것도 우리”라며 “망월동 국립묘지 성역화도 우리가 했다. DJ가 한 게 아니라 YS 때 신한국

당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호남 지역을 가서 호남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들어 이제 우리를 더 핍박하거나 출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왜 출대받는지 모르겠다는 홍 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듯하다”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호남을 출대하고 핍박했던 당사자 아니냐”고 힐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신단지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